

K-TV 대담자료

김영남
김영남

2002. 10. 1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WSSD 회의에 이어 지속가능발전 제2기 위원장의 책임수행 부담이 크다. (리레이팅 구해함)
 ② 4년 1기 위원, 1기의 임기, 경험 (신진진로, 위원회의 정기활동) 기획위원회
 1기의 임기까지도 깊은 보람해 가져다 줬겠 노력하리라. 공공기관

-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과하고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 대하여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인류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과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2000년9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본인도 제1기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였지만 강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1기 위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사전검토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기초를 다져놨음.
- 따라서 1기 위원의 노력이 헛되지 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지속가능발전이 정착되고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함.

2.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설립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1992. 6. 5 브라질 리우에서 114개국 국가 수반이 참여한 「UN 환경 개발 회의」 ^{이후 의제 21 채택} (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약속 ^{유엔과 36개국 정상들이 합의}
^{국제환경기, 개발환경기 채택하고. 1993년 UNCED에서 의제 21 이행계획 통과.}
- 그 이후 96년 환경부 주관으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 UN에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90% 채택} 계획의 이행을 추진 독려할 기구의 부재로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 국내적으로는 국토의 난개발과 같이 환경을 고려치 않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기, 물, 토양의 오염을 심화시켜 생태계 자체가 훼손되고 있고
- 한편으로는 동강댐 건설과 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음.
- 이에 따라 1999. 4. 22 「지구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 인사 100인이 개발과 보전정책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면서 기후변화협약등 국제적 지구환경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조직이 필요하다는 선언 채택하고

8.5 태풍경으로 원상복구
9.20 이후부터 유엔환경총회

- 2000. 6. 5 「세계 환경의날」에 대통령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공식선언 하였으며
- 2000 . 8. 5 대통령령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 공포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2000 .9. 20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되었음.

3.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내정책)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내정책}
-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내정책)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내정책}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내정책}

○ 법상에는 없지만 중요한 것으로 파트너십의 형성이 있음. 지속가능발전이 사회·경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발전전략이므로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능도 중요하고

○ 그밖에 세계 NCSD와의 교류 협력,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음.

○ UNCED, 국제기구에 제출한 환경협력 계획

2002. 2. 4 New York 개최 - 4 < 세계개발포럼 >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내정책

4.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자체가 어려운데 그 의미를 쉽게 풀이해 주십시오

SD이란 말은 원래 환경개발의 원주임으로 이쪽 주위에서는 생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개념의 중요성으로 주관적이라 하기 어렵다.

- 1968년
로버트
<SD정의>에
1972년 스웨덴의
인간개발위원회
78년 1983년 7월
<세계개발
위원회>
-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

- 이 위원회는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과 개발, 그리고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UN에 제안하여 설치된 것임.

-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WHO 사무총장이며, 노르웨이 수상을 역임했고, 당시 노르웨이 야당 당수였던 부른트란트 (Gro Harlem Brundtland) 여사였음.

- 3년간의 연구 성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비로소 사용하였음.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구촌 차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정의로운 발전을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 시켰다는 점임.

- 즉 남쪽의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환경문제와 연계시켜 기존의 발전개념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킴 없이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음.

우리의 삶과 미래인 생태계도 걱정이며 미래 생존의 곳이다.
주요한 것은 생태계도 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위한 활동이
후대에게 물려줄 것

자연환경은
미래를 위한
SD의 핵심
개념, 사회, 경제, 환경
개발은 모두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

-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각 사회집단들의 참여이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의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임.

5.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1기 위원회 활동중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임, 어떤점이 아쉬웠는지

-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처음 발족을 하면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됨. 우리 위원회도 1기 위원 모두가 초대 위원회임을 자각하여 이 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의 틀로서 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
- 몇가지 예를 든다면, 먼저 위원회의 중장기 핵심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원칙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국토보전, 수자원관리, 에너지 시스템 등 10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 40개 국가 주요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므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조성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 또한 금년에 개최된 WSSD의 국가준비위원회로서 참가에 대비하여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동남아시아/NCSD간의 협력관계 구축 (인도, 중국, 미얀마, 태반 등)

○ 이제기 이렇 위한 제로관리 비전 노력 등

-74-

시행하고 29년

1998년 12월 19일 2000년 12월 19일

governance 개혁

국내총생산 - 1998년 12월 19일

2.3급 관료의 주도

반도체 기술 개발

- 회의시에는 정부와 NGO간 상호 파트너십을 통하여 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브리핑 회의를 개최하여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 일본 NCSD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NCSD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PCSD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음.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위원회의 목표가 갖는 개념의 추상성과 첫 시도라는 제약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방법으로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형성에 있어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 그리고 비효율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음.
-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일부 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 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 새로운 governance에 대한 필요성의 확산, 중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한 인식공유 등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음.

새만금 행방취급장비
수정하기 있음.

새만금 11.9.2

36%의 강행취급의 12
NCTO의 후방본리.

6. 위원회가 UN의 권고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 위원회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나요?

PCSD 설치 배경에서 설명

-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면서, 그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구(Global)차원에서는 UN에 UNCSD를 설치하고, 각 국가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를 설치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약 60개국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된 나라를 보면 대개 민주적인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들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필리핀, 몽고, 태국, 이란 등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상 그리고 운영방식은 각국의 형편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형이다 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립하고 이를 평가보완하는 것은 공통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2000년도에 발족하였습시다라는, 외형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위상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장관회의, 현재에 노동(취업)이 같은 위원회의 민간
각국의 민간 대표들을 구성

실질적으로 이쪽(민간)에 위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
사회경제적 + 경제적 필요성
2.3 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위기



○ 몇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는 확실한 임무를 갖고 발족하였습니다. 개발이나 보전이나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을 빚어 왔는데, 위원회가 양자를 잘 조화시켜 그야말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야한다는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도 이미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 둘째,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각 부처 장관과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각 부처 공무원들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셋째, 민간출신 위원이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위원기구구현을 위한 노력*
- 넷째, 완전한 행정조직은 아니지만, 기존의 **조직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한 것도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원회가 위상이나 기능이 외형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북한산 관통도로와 같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지속위가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의제21 내지는 WSSD 이행계획의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보완하는 일과 개발과 보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현실문제와 동떨어진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회는 너무 한가한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어 우리 사회가 미리 걱정을 해야 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 또는 관계 부처나 집단 또는 계층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과제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남의장비서관: 장문으로
 비서관: 문정영, 황희로 방문
 부서관: 김이영, 김희로 방문
 부서관: 임도현, 김희로 방문
 부서관: 연호, 이영, 김희로, 황보로 방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희로, 김희로 방문
 환경부: 김희로, 김희로 방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희로, 김희로 방문
 공공(내부)관: 김희로, 김희로 방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희로, 김희로 방문
 문화: 김희로, 김희로 방문

-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와 같은 사업집행단계의 현안들은 이미 정부의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고, 이미 논의의 핵심이 보전과 개발에 관한 합리적인 토론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라 위원회가 관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가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입안단계부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이러한 갈등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종현의 책의 뜻 - 정치적 책임 부담

8. 1기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앞으로의 대책은?

정부 후계행정의 필요성 - 현실행정 → 현대행정으로
 VCO 후계행정 → 현대적인 현대

- 새만금 사업은 당시 위원회가 초창기에 그 성격형성을 충분히 모색해 내기도 전에 주어진 과제였고, 새만금 사업이 갖는 현실적, 상징적 의미가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역할에 대한 첫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었음.
- 결국 위원회 자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시민사회 출신 일부 위원들이 상당 수 사퇴하고 위원회가 공전되는 아픔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얻어낼 수 있었음.
- 민·관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governance의 정립, 중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성 보강을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힐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거나 개정하는 중·장기계획이나 정책을 원천적인 단계에서 위원회의 사전검토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검토가 보다 전문적이면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 영입을 확대하는 등의 위원회의 운영도 일부 보완되었음.

반노익에게로 대등한 이해
최종적으로 ^{재판} 정해 갈라져야 할 것임

- 13 -

- 결론적으로 새만금 사태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의 부재, 상호신뢰와 협상을 통한 토론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실 파트너십의 부재 문제는 단기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원칙과 전통을 확립해 나가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 이슈에 대하여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정리하면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 정신을 살리는 길임.
- 성급한 결론 도출을 시도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경계하면서 아울러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음.

9. 금년에 40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제가 도입되어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정책 속에 지속가능발전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속위의 기본 기능이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설정과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임.
-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속위의 설립취지로 볼 때도 사전검토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검토제의 조기정착과 내실화 여부에 지속위의 역할에 대한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개발과 보전에 관한 40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자문내용이 중장기 계획은 물론 이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단기계획에 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함.

문제는 사전검토제 정착이 중요하고
- 15 -
사전검토의 비실용적이지 않은 인력, 재정, 제도
대응에 시정하고 앞으로 주력할 만한 이면도

-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금년에 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사전검토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여타 38개 계획에 대하여도 미리 예비검토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10. 위원회의 자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문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속위가 자문한 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정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을 운영원리로 하는 지속위를 구성한 이상,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숙의한 자문결과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두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또 위원회로서도 모든 자문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급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자문결과가 정부 정책에 조화롭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지속위가 감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이 반영되면 반영된 대로 반영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회의 자문 활동에 환류(feedback)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속위의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물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장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 제1기의 경우에는 초창기고 자문건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제2기에서는 사무국에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하여 자문 건별로 각 부처의 관련정책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37771 - 362224 노조(034444)비서단

11.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는 빈곤, 소비행태, 노동, 여성 등 경제·사회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위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됨. 그러나 지속위가 출범하였던 2000년 당시에는 동강댐 문제 등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자문이 대단히 중요하게 요청되었던 시점이었음.
- 이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는 전체 토론을 거쳐 6개 분과(국토보전, 수자원, 생태·보건, 에너지대책, 산업과환경, 국제·지역협력)를 우선 설치하고 분과별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과제를 발굴, 자문키로 한 것임.
- 이런 점에서 지난 1기 위원회에서도 경제분야 및 사회분야를 위원회 정책자문활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분과 구성의 한계 및 이들 분야 당연직 위원(각 부처 장관)의 결원 등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 과제는 2기 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음.
- 2기 위원회에서는 분과의 구성 및 운영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진행하여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자문과제를 최대한 수행하려고 계획중임. 빈곤, 소비행태, 여성 문제 등은 의제21 평가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의제21평가 및 실천계획 수립시 중요하게 반영할 예정임.

12. 지난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WSSD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이에 대한 지속위의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가

- 지난 8월 개최된 WSSD는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음.
- 이 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생태 및 자연자원 보존, 에너지, 세계화, 자원, 무역, 기술이전 등 이행수단 마련, 거버넌스 등이 주요 협상쟁점이 되었음. 이행계획의 협상 결과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의 설립, ODA의 목표달성 촉구 등 대부분의 이행계획서 문안을 타결하고 협상안을 채택하였음. *이행수단협약, Kyoto의행의 비준*
-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요하네스버그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협력사업으로서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을 제안함.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감축의무를 표명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발효가 가시화될 예정임.
- 향후 지속위는 이번 회의의 결과로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관점인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고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응해 나갈 예정임.

- 특히 21세기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이념의 실현을 위한 실천역량의 강화와 국민의식확산에 주력하여
 - WSSD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 국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정부·기업·시민사회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및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
 - 국가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범국민적 합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또한 국내 정책수립 및 이행평가 그리고 국제협력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 매년 UN에 제출하는 국가의제21(National Agenda 21)에 대한 이행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 UNCSD 정기회의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체계적인 참가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 NCSD간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에 많은 국내 단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

기타 함 뜻임

13.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관련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력에 문제가 없는지

-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행주체간 논의구조(Multi-stake Holders Dialogue)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개별국가 차원(National level)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간 합의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예컨대, 에너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국내 대응태세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참여, 국민 전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임. 1%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열배(1000%)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즉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체의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함.
- 파트너십은 목표에 대한 공통 인식, 상호 존중,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 세련된 운영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함. 그러나 지난 새만금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경직성, 민주적 의사 수렴구조의 취약, 상호신뢰의 부족, All or Nothing 의 사고분위기 등등 서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지난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구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임. 지방의제21 협의회와 같은 지방단위의 파트너십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현 시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 의제21평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사전검토제도의 운용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를 확장할 예정임.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속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의 시대적 흐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짐. 그러나 우리는 경쟁적 지역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심화시킨 부작용도 나타남.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지방 의제21’ 사업이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남김. 하지만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환경보전 중심의 실천운동에 치우쳐온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형성됨.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LCSD가 구성된다면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구조가 확립되고, 정책을 둘러싼 부서간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통합적 정책 형성의 제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는 LCSD의 기능을 하는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기구들이 오래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음. 영국의 에던버러나 미국의 미네소타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타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침에 맞추어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LCSD를 설치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것으로 자문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제21의 활성화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임.

국무총리에게
민간기구로
324144으로

신뢰(신뢰)주
공공기관으로

신뢰(신뢰)주
신뢰(신뢰)주
신뢰(신뢰)주

신뢰(신뢰)주
신뢰(신뢰)주
신뢰(신뢰)주

15. 외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 리오 회의가 있었던 92년 필리핀에서 제일먼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 100여개국가에서 기구의 명칭이나 소속,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에 다서 차이가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의 소속은 미국·일본·프랑스·핀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가 대통령이나 수상 산하기구로 설치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독립된 연방정부기구로, **멕시코**는 환경부 산하에 그리고 **네덜란드**는 외무부의 독립재단으로 설치하고 있음.(미국은 1993년 6월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이래 1999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해체됨)
- 위원회의 기능은 대부분 의제21의 실천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정부 및 산업계, 노동계, 학계, NGO 등 민간대표가 다양하게 참여하며, 20~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위원장은 핀란드 등은 총리가, **온두라스** 등은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등은 부통령이, **멕시코**와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민간위원이 맡고 있음.

민간위원의 역할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는 외국과의 교류협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 지속가능발전은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도 보듯이 지구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임. 우선은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시아지역과 아시아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류가 중요함.
- 우리는 지난 7월,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등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를 초청해 「동아시아 NCSD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아시아의 역할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의 증진 등 많은 성과를 얻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이어서 지난 8월 30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아시아-태평양 NCSD 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내년에 제2차 「동아시아 NCSD 워크숍」을 몽골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교류협력사업인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의 현안인 사막화, Capacity Building, ODA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유럽등 선진국 NCSD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지난 7일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UN 차원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임.

17. 앞으로 2기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제1기 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2기 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를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과 지난 6월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권한을 갖게된 국가의 주요정책 및 40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 또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보완하고, 이번 WSSD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중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현황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활용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지속가능발전관련 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지속가능발전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해 추진하고, 동아시아 NCSD 교류 뿐만아니라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강박관
국민의힘의 강박관

18.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업, 민간단체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가장 중요함.
-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의 후손, 즉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평등하며,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세대가 매년 봤던 제비를 비롯한 많은 동식물을 지금의 도시 아이들은 거의 못보고 있음. 이것은 불과 십수년전부터 급격히 일어난 것이며 우리세대의 책임임. 또한 지구적으로는 종이 등의 많은 사용으로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재생의 한계를 벗어나 사막화,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
-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편하자고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하는 것, 일회용품, 음식물 등 자원낭비로 인한 엄청난 폐기물의 발생, 생활속에서 에너지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등 많은 지속 불가능한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 바꿔나가야 함.
- 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라는 걸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고, 깨끗하게 돌려줬으면 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